'쌀농사' 포기할 일만 남았나?

지난 4월부터 8개월 동안 진행된 쌀 관세화 유예협상이 마무리 되었다. 물론 아직까지 정부가 최종 협상안을 발표하고 공식적인 종결 선언을 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지난 8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과의 8차 회담에서 허상만 농림부장관과 앤 배네만 미 농무장관이 주요 협상안에 대해 최종 합의함에 따라 사실상 쌀 관세화 유예 협상이 마무리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정부는 밖으로는 미국 · 중국 등 주요국과 여타의 협상 상대국과의 최종 조율을 하는가 하면, 안으로는 농심을 달래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꼭꼭 숨겨놓았던 협상안이 밝혀진 상황에서 정부의 미흡한 소득대책과 양정체계 개편안으로 과연 성난 농심을 달랠 수 있을까?

이번 호에서는 최종 합의된 협상안의 주요 내용과 협상의 대가로 정부가 내놓을 소득과 양정대책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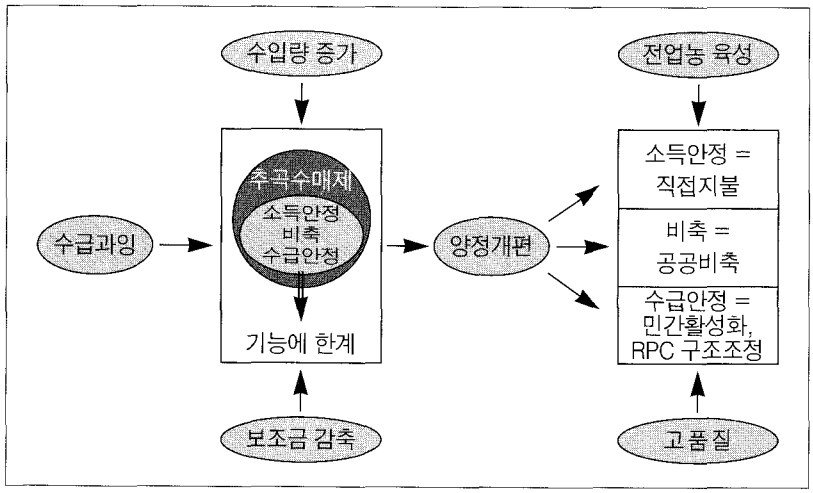
의무수입량 7.8%, 소비자 시판 30%로 타결

앞서 밝힌바와 같이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일부 언론의 소식통에 따르면 각국별 할당량을 제외한 최종 협상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합의했으며, 조만간 협상 종결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요 협상안의 내용은 의무수입량은 당초 8%대에서 7.8%로 합의되었고, 수입쌀의 식용 판매는 수입물량 중 75%선에서 10%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최고 30%까지 늘리는 것에 합의했다. 또한 의무수입물량을 제3국에 수출하는 것을 허용해, 북한에 원조할 수 있는 '민족 내부 간 거래'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문제를 다 푼 것은 아니다. 미국과 최종 합의를 했다고 하나 아직 중국과의 최종 합의가 남아있다. 비록 중국이 미국과의 합의안을 수용할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미처 합의하지 못한 각 국별 물량 할당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두고 볼 일이다. 미국과 중국 등

<정부의 양정체계 개편방안 (2004.12 농림부)>



이른바 주요 상대국을 제외한 협상대상국들도 막바지에 와서 자국과의 협상에도 충실히 임해 줄 것을 요구하며 각각의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런저런 문제들이 남아 있다 할지라도 미국과의 최종합의안이 올해 쌀 관세화 유예협상의 최종안이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은 판단일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협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것을 비춰볼 때 여타의 상대국들과 최종 합의를 하는 것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부, 규모화와 직불제로 가겠다!

한편, 정부 고위급들이 각국으로 합의안에 서명을 하러 다니는 동안 국내에서는 농림부 차관보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농심 달래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직접지불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어서 오는 17일에는 그간의 협상내용을 공개하고 소득 및 양정체계 개편방안에 대해서 농림부와 외통부, 제경부의 공동주최로 '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정부의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은 쌀 관세화 유예 협상이 농민들의 주장보다 훨씬 퇴보한 조건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구조조정을 통해 양정체계를 개편하고, 소득보장을 통해 피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로 가겠다'는 정부 방침을 설득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쌀 수입량이 현재보다 2배가 넘는 수준이고 소비자 시판도 일부 허용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내 쌀 과잉으로 수급조절에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 또한 DDA농업협상을 통해 보조금감축이 불가피 해짐에 따라 추곡수매제의 기능에 한계가 있어 폐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를 보완하고 농민들을 달래기 위해 규모화를 통해 전업농을 육성하고 국산 쌀을 고품질화 시키며, 수급안정을 위해 민간수급기능을 강화, 추곡수매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소득하락분 내지 영세농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소득보장을 위해 '목표가격 지지제도'를 비롯한 각종 직접지불제를 도입하겠으니 정부가 추진한 협상안에 대해서 수용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농민이 평가하는 쌀 협상과 국내 대책

협상의 막바지로 들어서면서 마지막까지 의무

수입량 8%와 식용판매 75% 등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던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의 의무수입량 7%대와 식용시판 10~20%수준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요구수준을 낮춘 것에 대해 정부가 '최선을 다했다' 고 자찬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현재의 협상안은 최상의 협상안이 될 수 없으며, 협상과정상에서도 크나큰 오류를 범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협상 초기부터 지금까지도 '올해 안에 종료시켜야 한다' 는 폐쇄적인 관점으로 협상에 임하여 상대국의 무리한 요구까지 모두 수용해 줘야 하는 오류를 범했다. 쌀 협상과 국내 대책의 최대 수혜자인 농민들은 물론 국민들에게 마저 협상내용과 진행과정을 공개하지 않은 채 협상을 진행하는 비민주적인 오류를 범했다.

협상에 따른 국내 대책에 있어서도, 정부가 지난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에 발표했던 소득안정대책은 생산비와 물가상승 인상요인을 반영하지 않았다. 17만원이라는 목표 가격 책정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 3년 후 목표가격을 다시 책정할 때에도 농림부장관이 결정권을 가진다는 것은 목표가격을 하락시킬 의도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정부의 장기적인 양정정책을 보면 10년 후 평균가격을 10~12만원 선으로 낮춘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소득보전 비율도 하락분의 80%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각종 직불제의 수준도 향후 농림예산 대비 20%까지 올리겠다고 하는데, 이는 EU의 70% 수준과 미국의 50% 수준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이다.

장기적인 양정체계도 과거 10년 전에 실패했던 규모화 등 구조조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직불제 중 구조조정을 보상하기 위한 직불제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현재 쌀농가의 막대한 농가부채와 농촌의 피폐화는 정부의 잘못된 구조조정정책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과거의 정책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반성이 없이 답습에 답습을 거듭하고 있다.

쌀 협상과 양곡정책! 이렇게 가야 된다.

쌀 협상이 마무리가 됨에 따라 이제 우리 농민들에게는 '쌀농사를 포기하는 일' 만 남았다. 수입쌀에 대비한 우리의 소득대책과 양정체계가 너무나 미흡하고 방향도 틀렸기 때문이다.

우리 쌀 농가가 계속 지속될 수 있게 하려면, 정부는 이제라도 협상의 종료시한을 올해에 국한시키지 말고 계속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식량자급의 달성과 안정적인 수급조절을 위해서 현재수준의 추가개방은 어렵다는 기본방침을 세우고 전면적으로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

또한 잘못된 소득대책과 양정체계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중장기적으로 농가의 불안정한 소득구조를 보완할 목표소득지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직불제 수준을 선진국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둘째, 정부가 발표한 쌀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를 올바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목표가격에 생산비와 물가인상분을 반영하고, 목표가격 설정을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각종 직불제는 실경작자 위주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편하고 직불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재원 확보를 위해 직불제 정책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넷째, 양정체계의 큰 틀을 개별농가의 규모화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경영체가 육성되도록 해야 한다. 한농연